
개성공단 기업인 초청좌담회 녹 취 록

일 시 : 2012. 09. 04. (화) 14:00~17: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03-1호

* 좌담회 참석 기업인들의 요청에 의해 각 기업인들의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조봉현 박사

남북관계가 많이 막혀서,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게 개성공단인데, 그마저도 순탄치 않구나, 경험자체가 잘돼야 남북관계 잘되고 중소기업들도 잘되어 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정부가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듣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진전이 없었고 새로운 정부가 곧 탄생할 거고, 개성공단은 내년되면 10주년 되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놓고 국회는 국회차원,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의 애로들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책적으로 대안도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리드하고, 건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는 게 정부를 압박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 국회의 힘이니깐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담회 진행방식은 돌아가면서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중간 중간에 이슈화 되는 문제, 인력문제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금융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화시켜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A 업체 대표

개성공단 사기업이 민간기업이 들어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업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개성공단입니다. 출입부터가 통제를 받아야하고 더욱이 북측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고, 북측 당국이 시장경제에 문외한이고, 자기 특히 기업이 움직이는 이치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거기에 일부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심어 준 것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작년도에도 70개 기업 정도가 적자를 내고 이익을 낸 데는 53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입주 시기별로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다.

인원을 받는 충원율로 입주시기별로 차이가 나고, 전에는 더 쓰라는 주의였다가 08년도 이후에는 인력수급이 딸리면서 필요한데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입주시기별로 기업 자체의 경영형편이 상당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데, 개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획일주의고 공산주의라 모르겠지만, 일부 기업이 잘되는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잘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오인하고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와서 세무신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적자신고한 기업도 많고 하니깐 기업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이 심어준 부분도 있다. 정말 그 개성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원만히 관리하고 상황을 끌고 가지 않으면 기업은 거기 가서 인질 아닌 인질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몇 년이 왔습니다. 정부가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관리위원회라고 나가있는데 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북측법상으로 중국의 지도를 받는 관리기관이거든요. 중국은 지도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깐 공단 밖으로, 개성공단이 없어지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저기 되면 그 사람들은 실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소신 것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깐 관리위원회가 우리 정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지만 어떤 대외,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맞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각자의 입장이, 신분에 대한 불안, 이렇게 있다보니깐, 기업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래도 강력한 연결고리로 뭉칠 수 있게끔 해줬어야 했는데, 북한당국이나 통일부나 분리해놔야 끌고 가기 쉽고 뭐 말 잘 들을테지 하는 생각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일반 공단 같은데 보면 공단 입주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단단체가 있어 공단의 전체적인 룰을 만들고 규제하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사실 그런 기업간의 연결고리도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부당한 조치라든지 횡포 이런 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은 더욱이 힘이 없으니깐 세무

보험 이런데서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개성공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세세히 귀담아 들어주는 데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 안하고 지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가 남북관계 전반을 잘 끌고 가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폐쇄만 안했으니 그래도 니들은 많이 봐준게 아니냐 다른 데는 다 잘랐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는 기업이 거기서는 정상적인 활동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 조봉현 박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잖아요. 남북관계에서는 정부가 큰 틀에서 보호를 해주고 나름대로 여건을 구축해주는 것인데, 어려울 때 정부가 기업에 떠넘기는 행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B 업체 대표

나는 5.24 조치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한 기업 잡아먹은 염라대왕이나, 나라에서는 가라고 해놓고 하나도 조치도 안 해놓고, 물론 대북경협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북통일인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경협사업도 하는 거고 금강산관광도 하는건데 대기업을 되었던 소기업이 되었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짜고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떤 경우에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무조건 경협사업만 밀어부친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후약방론 식으로 이제 와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 하는데, 이미 자금없는 기업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국가에서 일을 추진하면 거기서 죽어나는 것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좀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이건 북한하고의 거래다. 일반적인 국가와의 거래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손해가 안 가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거 명 짧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
상법도 만든다고 하는데 아주 좀 완벽하게 해서 기업에게 최소하게 손해 손실
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 간 문제에는 기
업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C 업체 대표

5년 동안 정말 우는 소리도 많이 하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많은 관계 기관
을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어떤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이번 박 부의장님이 마련해 준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남북관계는 한
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죠. 기업은 기업을 완만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한
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 완만한 기업 경영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울부짖음이 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와서 수십차례 건의하고 민주당, 새누리당 등 여
러 군데 건의를 드렸는데 많은 애를 써주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돌아오는 효과
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인택 장관이 2010년 봄 정기국회 답변
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하고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자금을 140억을 조성해
서 긴급하게 자금을 풀어서 기업의 자금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최근 1월 30일 김천식 차관이 간담회 하면서 남북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내용
이 아닌 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립서비스였습니
다. 또 그것이 필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옥석을 가
려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답변이고 진행상황입니다. 그런데 지
금 대통령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1월에 답변한 그 내용이 너무나 상황이 급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최근 8월쯤에 실태조

사가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10월에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10월에 보고서가 올라가면, 긴급하게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자금은 과연 이 정권 임기 안에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기업인들 사업할 수 있게 장은 열어놓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지원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부의장님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 결과가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조봉현 박사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성공단 대한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악이 되면 바뀌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되고 하면 바뀌야 하는데, 바꾸는데 있어 노력이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단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바뀌나가고 끈질기게 해야 하지 생각합니다.

D 업체 대표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입주자 업체라든가 북측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북측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현 정부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B업체 사장님이 정부가 퍼펙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퍼펙트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무색한 그런 실정인거죠. 우리가 흔히, 나름대로 예측하기로서는 현 정부, 실용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전체적인 대북정책까지는 몰라도, 경험부분에서 만큼은 전 정부 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MB께서는 기업가 출신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퍼주기식의 논란을 잘 잠재우면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라든지 내륙의 임가공 업체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 이런 기대

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에 나들섬 공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진강 하구에다가 인공섬을 조성해서 거기다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만들겠다. 뭐 지금 무위로 돌아간 공약입니다만, 그런 공약이 있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남이나 북이나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든지 간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정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남북경협에서 만큼은 이제는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정부에서 해준게 없다는 C 대표님 말씀대로 고단할대로 고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가지고 앞으로 집권하는 정부에게 이러 이러한 것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엇그제 손실보상 입법화하자 얘기도 있었고, 여러 관련 세미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최소한 우리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요목조목 정리를 해서 새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끼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들을 모셔다가 대북정책,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도 따져물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삼을거냐 이런 것도 물어야 한단 얘기입니다.

E 업체 대표

앞서 말씀하신대로 수없이 국회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많은 간담회 등에 참여한 후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기대한 만큼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적인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정부나 국회가 모르고 있겠느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경협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단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고, 정부와 북측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하는 것들을 사실 모르고 있을 거라도 생각 안합니다.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

이 현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고, 누구를 믿고 과연 적지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하고 대한민국 태극기 앞에서 손을 올리고 자랑스럽게, 자랑스럽다고 한국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 동족에게 가서 사업을 하라고 내몰려쳐놓고, 정부에서 이 어려운 사실을 기업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북한의, 하물며 나이 어린 애들에게까지 얼마큼 핍박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내팽겨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정부가 한 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수없이 간담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의 사업의 현실상을 모르면서 각종 간담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가 정말 진심어린, 개성공단에 대한 보살핌을 가지고 힘을 줘서 용기를 실어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용기를 주면, 저희도 사실 개성공단 북측과 싸워서 정당한 사업요구를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개성공단이 개인의 사업능력으로서 사업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그래도 개성공단 까지 갔을때는 여기보단 뛰어났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측에 가서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 까지 천대받아가며, 심지어 욕까지 얻어먹어가며 이렇게 까지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개탄스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북측 총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거기에 수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북한의 악법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고 지금 그런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후발업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3년 6개월이란 세월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성공단에 갔던 꿈은 준공식을 하고 1년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2년차 되는 해는 운영 대비 흑자를 내고, 3년은 투자 대비 흑자를 낼 계획을 잡고 갔었습니다. 공장 착공 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 3년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3년이 되는 해가 올 2월달이었는데,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3개월만에 1억 2천 5백씩. 지금도 현재 저희가 개성공단 오픈을 해서 3년 되는 해까지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인원의 50%만 되는 인원만 가지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후발업체들이 얼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지인 및 은행에 사정을 하면서 적자난 부분을 계속적으로 메워왔는데 갑자기 상환일이 도래하니 이걸 앞이 깜깜한 거예요. 기업은행 거래 중인데 가서 상의를 하니, 딱 1년 연장 해주더라고요. 1회성으로요. 내년에는 올해 연장한 것과 내년에 도래할 것을 같이 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50% 운영하다가 4월에 추가 인원을 받아서 600여명 되는데 거기서 결근자 5~8%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협사업은 기업을 앞세워서 정부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앞서서 가서 경험을 하고 있으면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업체 나간 업체들과 후발업체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발업체 공장에 가보면, 20대 노동자로 이루어지는 등 굉장히 좋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인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서 40세 후반에서 50대가 50%가 넘습니다. 생산성이 안나와요. 또 불만도 많고, 나이 먹은 사람들과 일을 하려하니 타협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선발업체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경협자금을 쥐가면서 들어갔다고 하던데, 후발업체는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회사 신용에 따른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우수기업들한테 신용 조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업체는 신용결과가 좋게 나와서 남북경협기금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오픈을 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오더가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대기업 업체의 하청을 8년 정도 했는데, 개성공단 들어간 후에 그런 하청도 떨어졌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개성공단 들어갔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제 모든 자산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개성공단의 장비, 시설도 다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개성공단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가 해서 지금 이율도

11%짜리 쓰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대출에 있어 신용이 맞지 않아서 기업은행에서 11%까지 이율로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 열심히 해도 이율이 높아 이자 내기도 바쁩니다. 저희 후발업체들이 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담보를 다 정부에 드릴테니 경험자금으로 해서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A 업체 대표

그게 18대 당시 한나라당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일반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때 인제 경험자금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대안으로 나온 게 신보해서 특수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을 근거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도록 했는데, 사실 08년도 2월 달에 정부가 바뀌고 나니깐 07년때 신용조사, 기업평가 점수 받아보니까, 07년때까지는 개성공단 진출하는게 유망하다해서 플러스 가산점으로 작용했는데, 08년도에 받아보니까 리스크 부담이 크다 해서 평점을, 다른 재무제표 점수하고 하고 해서 감점을 많이 시키더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법에는 개성공단 지원법에 보면, 국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과 똑같이 보호해주고 육성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개성에 있는 담보는 담보가치를 전혀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그나마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 들은 것 정도만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것도 인정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후발업체들 보면 가장 어려운게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못했어요. 제대로 이익도 못 냈어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3년이니깐, 거치기간은 다 지났어요. 그래서 빚을 상환해야 하는데, 근데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성에 있는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담보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원금상환이 다가오는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E 업체 대표

그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 박병석 부의장

왜 대기업에서 하청을 끊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니까?

E 업체 대표

이유가, 불안하니까요. 안정적이지 않고요. 바이어가 오더를 줬을 때는 안정적인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공급을 못 했을 때는, 납기를 못 맞추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안좋았을 때는 일부 브랜드 대기업들이 오더를 넣다가 빼고, 반제품도 빼가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 조봉현 박사

사실은 개성공단 기업이라는 게 역차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성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 기업은 북한쪽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고, 그렇다고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또 북쪽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못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별 은행들이 스스로 나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실은 금융이나 금리나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되었던 기재부가 되었던 이런 쪽에서 남북경협하는 기업들을, 특히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잘못되고 대북정책을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금리 같은 것도 동결하고, 연장하고, 감면을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 조치가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딱 내려잡니다. 연장조치 해줘, 금리 깎아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개성공단에 대한 이런 지원을 못해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런 것에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합니다.

F 업체 대표

저는 아직 입주를 못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고 기공식을 할려는 찰나에 5.24조치로 인해 그때부터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입주자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개성공단이 왜 생겼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생긴 것은 남북경협이 필요성도 있었고 한반도의 안정화도 있었고, 전쟁의 억지력도 있을 것이고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논리가 있기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남북경협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개성공단 만큼은 남과 북이 함께 발전시켰어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하다보니깐, 안타깝게 개성공단이 마치 서자 취급받는 그런 상황에 온 거 같아요.

우리 뿐만이라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관계도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잘 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를 국회 차원에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미입주한 업체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면은, 지금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갈까? 가지말자 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전에 개성공단에서 토지매매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성공단 투자를 고민하는 지인에게 조금 있으면 정권이 바뀌고 하면 좋아질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 휘둘릴 텐데 이게 제대로 될 거 같아? 새누리당이면 뭐하고 민주당이면 뭐할 것이냐. 또 그 논리대로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구구절절이 듣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아픔을 당하리? 나 안한다”이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성이라는 곳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개개의 기업들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했으면은 진출하려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기업에게 무언가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까짓 개성에 진출한 업체가 123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입주한다고 해도 250개도 안됩니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혜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창구인데 이것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미입주 업체들도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직시하셔서, 이미 들어가신 부분도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입주할려는 업체에게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를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정경분리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도 경제개발계획이 있듯이 기업도 투자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치게 되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접촉승인을 통일부에는 받았지만 북한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게, 보류시킨 것이, 아마 북측이 이 정부에서는 몇 달 안남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안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올해도 저희는 평양에 들어가서 다른 봉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조봉현 박사

개성공단의 어려움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개성공단의 희망 자체가 없고 있다는 것이 지금 더 안타깝지 않나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

뉘보도록 하겠습니다.

B 업체 대표

저는 개성공단 진출업체 중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 중에서 6개 업체가 협동화사업을 하는 업체였고, 5.24 조치로 건물 90% 지어 놓고 중단되는 바람에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말로는 90%론데 실질적으로는 70%밖에 받지 않았습시다. 보험 그렇게 잘 안줍시다.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사회 일부 정서가 개성공단이 나 대북사업 진행하는 업체들을 친북성향으로 봅니다. 아니면, 영리만을 추구하는 속물로 봅니다.

보험 보상 때문에 통일부부터, 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여기 다녀보면, 공무원들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요. “당시 뭐 노무현 정권때 혜택 많이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야단이야” 이룹시다.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보는 일부 시각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시다.

E 업체 대표

맞습시다. 실제로 그런 시각이 많습시다. 한 예로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개성공단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어?” 하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런 혜택을 없었고 정부가 경협차원에서 발판을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력으로 들어갔습시다라고 말씀드렸습시다.

그랬더니 그 분이 못내 그것을 못 믿고 정부에서 혜택 받지 않았냐고 되물으셨습시다. 참여정부에서 대북경협지원자금 많이 받지 않았냐고 합니다.

또 한 모임에 나가서 개성공단에서 기업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전 정부 요직에 계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정일한테 뭐 얻어먹을게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갔냐”고 하시는데, 내가 남측에서 편하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까지 천대를 받으

면서 개성에서 사업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남이나 북이나 우리 정부나 북측 가서나 상당히 많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사무소로 들어가서 CIQ 개성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개성공단에 투자한 사장이고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북측 CIQ에서는 “이리 가,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합니다.

F 업체 대표

그게 아마 남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위 조·중·동이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수 언론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전달이 아닌 약간은 왜곡된 전달을 받아서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았는가 합니다.

B 업체 대표

법과 제도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니깐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업체가 보상 받은 거 다 상환하고 다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지금 북측에 있는 설비를 손도 봐야하지 않으나 가야겠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법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니다.

A 업체 대표

개성공단 사업 자체는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고, 북한 주민들의 남쪽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기업을 모르는 정치하는 사업들 주도

로 막 서둘러서 추진되다 보니깐, 기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움직이는 여건 조성은 제대로 안된 거 같아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 돈 들여가지고 뺏 더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사장의 말을 안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입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인원충원율이 50%가 안되요. 40~45% 밖에 안되요.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하나면, 북측세목 상에 영업세라는 게 있는데, 이 영업세는 건설회사가 수주를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1%를 북측 세무당국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북측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개성공단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유야무야되다보니깐 건설회사들이 일과성으로 2~3개 짓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짓다가 망한 경우도 있고 하니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기업들이 내가 낼 세금이 아닌데 왜 내냐 하면서 안내고 버티니깐, 나중에는 어떻게 압박을 가하냐 하면, 버스 대놓고 인원들을 몇 명씩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기업이 버틸 재간이 있나요. 뭐 건설회사가 안내 것까지 기업이 낼 수밖에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한테 버스 보험들었는데 차 사고가 나도 그런 것도 안물어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동차 보험도 안물어주는데 불 나면 이거 몇 백만불씩 건물값 물어주겠냐 합니다. 제보험도 안되어있고, 보험료는 여기보다 훨씬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보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장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측 관계자가 올 때 방문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집 드나들 듯이 수시로 세무서에서도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오고합니다. 나중에 법인장이 도망다닐 정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하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에 정부간 관계가 좋을 때는 북측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상당 부분 자제하고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간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하니깐 기업들한테 와서 이것저것 쥐어짜는 거죠.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2단계, 3단계 확장은 커녕 지금 1단계도 40%밖에 안짓고 나머지가 빈땅으로 되어있는데, 정말로 개성공단의 가치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북

측하고,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광범위하게 현안에 대해서 큰 틀을 만들어놓고 난 후에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업들만 가서 피해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세무, 보험 등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경험보험에도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기업이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철수할 때는 그것도 정부가 보험을 적용해줘야지. 그것만 바뀌어도 북측은 우리 기업이 나갈까봐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정도가 줄어들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D 업체 대표

교역보험이라는게 여기 해당하는 건데,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하면, 이럴 때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E 업체 대표

국내의 경우 해외유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하고 시설하고 해서 거의 100% 정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인력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

개성공단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사업하기가 힘들면, 그 시설을 가지고 차라리 국내에서 고용창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출받은 거는 갚아야겠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만 인력을 썼을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석 부의장

그 문제는 이미 개성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왔잖아요. 5만 5천명인가 다왔

고 그래서 새로운 젊은 인력을 데려오려면 기숙사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개성 밖에서 데려올 거 아니겠어요?

D 업체 대표

참여정부 시절에 2만호 기숙사 약속을 했거든요. 2만호를 짓겠다. 근데 지금 기존의 123개 업체가 수요조사를 한 인원이, 추가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추가로 요구하는 인원이 3만명이예요.

그렇다면 5.24 조치가 풀려서 이 업체 저 업체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개성공단 2단계, 3단계는 요원해지는 겁니다. 우리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에 물어봐야 해요. 집권하게 되면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할거냐 말거냐 이걸 물어 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 조봉현 박사

기숙사 문제는 남북한이 지난 정부에서 합의된 거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숙소만 남측에서 지어준다면 자기들이 함경북도라든지 자강도에서 인력을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쪽에서 그거를 승인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숙소문제 해결 없이는 아마 인력조달은 거의 한계에 찼어요. 아시다시피, 개성이나 인근에서 12만명인데 거기서 벌써 5만명 넘어갔죠. 그 다음에 노인, 어린이에 빼고 나면 이미 한계에 찬 거거든요. 최소한 60km 바깥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숙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깐요. 인력문제는 일단 숙소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A 업체 대표

그 지난 번처럼 어떤 전시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북한 수준에 맞춰서, 중국 공단의 기숙사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짓는다면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난 정부때 지을려 하는 거는 삼성전자 기숙사 정도로 하겠다는 것

인데, 그거 운영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 조봉현 박사

그래서 북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 개성시내의 자기들 수준이 있으니깐 그거 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 그거 보다는 약간 정도만 좋게지어달라고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토대로 뽑아보니깐 2만명 수준으로 400~5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투자하면 1차적으로 2만명을 수용할 시설을 지을 수 있으니깐 지금 급한 인력은 조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우리 측 기준으로 계획을 하니깐 2,000~3,000억 나오니 통일부에서 못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 업체 대표

북한이 답답하니깐 그걸 역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은 그 위에 금천군이라고 있어요. 평산군도 있고, 도로를 한 200~300억 정도만 들여서 개설하면 거기도 한 10만여명이 있는데 인력이 조달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오히려 북측에서 기업책임자회의에 제안을 해서 언론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오늘 찾아본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희석될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기업의 경영 매커니즘이 잘 적용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다소 환경이 어렵고 정부의 정책적인 텀이 생기더라도 기업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업 경영 매커니즘이 안통하는 지역입니다.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도 없구요. 노무관리 측면에서 황금평에는 있는 근로자 해고조항, 개성에서는 해고 못시킵니다. 그런 것을 문맥상으로도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처음에 합의할 때 적용을 해놓았다면은 인사관리, 노무관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사업의 퇴로가 있는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었다면 기업들이 경영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앞뒤로 막아놓고 경영을 하라고 하니 기업인들

은 불모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그 5년 동안 통일부를 늘 겪어 보는데, 최근에는 김천식 차관님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말 영원한 우리 친구들이다, 5.24조치 2주년 돼서 정말 이제는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면서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할때면 참 당혹스러움을 떠나서 가슴이 정말 먹먹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처가 아니다 보니깐,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당위성을 너무 내세우는 취지에서 하는 거겠지만, 기업인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익을 내고 상당히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많이 홍보성 멘트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실제적 모습을 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A업체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3개 기업이 흑자기조로 전환했고 70개 기업이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데, 과연 진실은 어떨까? 아닙니다. 이게 실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서 적자,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가진 관점은 그 손익분기점의 기준을 회계상으로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상쇄시키는 정도의 기점, 그걸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53개는 흑자기조입니다. 하지만 투자한 이자비용과 리스크 비용을 감안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53개 기업이 흑자냐? 전혀 아닙니다. 기업인들 내부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들어가서 5~6년이 되었음에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안되는 것, 그니깐 투자 대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깐 아무래도 투입산출이 안맞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이 있죠. 거의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한다는 거는 북쪽에 착취를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지금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세척까지 다 바뀌어서 과거에 까지 다 소급해서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그것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다 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것은 개성공단 기업의 부채규모가 계속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지를 뻔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호응 안합니다. 기업인들이 이런 실태조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실한 조사니깐요. 개성공단 현장에 가서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들한테 가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게 실태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쥐고 있

는 본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되어야하는데, 지금 8월 중순에 끝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현장 생산관리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를 10월에 써서 집행을 언제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여러 현안문제가 많은데, 대한민국 정책 자금 중에서 상환유예가 안되는 유일한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금융기관의 어떤 정책자금을 쓰더라도 상환유예가 다 됩니다. 물론, 시설 자금이나 이런 특수성은 좀 다른 뉘앙스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상환유예가 안되는 유일한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기업들이 이자 내겠다고 하는데, 이자 싸지도 않습니다. 그거 어려운 기업들에게 상환유예 시켜달라는 것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나와서 전 관련기관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되고 이대로 간다면, 저는 아마도 통일부에서 말하는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70여개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불상사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A 업체 대표

이게 그 입주기업들의 입주 시기별로 경영 형편 차이가 나고요. 대개 구조상 자기가 판매 시장까지 가지고 있는 데는 어차피 남북관계가 나쁘건 어떻건 자기 책임 하에 돌리는 공장이니깐 계속 지장을 안받겠죠.

그러나 저희들처럼 판매시장을 못가지고 남의 것을 하청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그때그때의 남북관계 상황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총량 자격분이 있는데는 북한측에 반도급을 주다시피 합니다. 얼마정도 하면 임금을 얼마정도 주겠다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보호물자까지 합하면 200불을 넘어섰습니다. 한 210불 정도 되는데, 그런데는 그렇게 주고도 팬 찹아요. 그러나 거꾸로 남의 것 하청을 받고, 늦게 들어가고 하는 업체는 늦게 들어간 만큼 인력의 질도 떨어지고, 충원율도 원래 남쪽의 생산성에 40~50%밖에 안되니깐, 근데 짓는 거는 1,000명 규모로 지어 가지고 인원은 500명 받고,

그 500명이 일하는 것은 남쪽은 생산성의 200명 역할 밖에 못하니깐 그런 면에서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는 거죠. 그런 업체간 차이가 큰데, 잘되는 업체 몇 군데가 기업 규모도 있고 먼저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잘 활용하고 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법정관리에서도 벗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몇 업체들에서는 참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란 데가 어려운 게, 어려운 업체는 정말 어려운데, 북측은 요 업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잘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형편이 어려운 업체나 적자가 나는 업체 모두 다 에어컨 놔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고서는 북측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어디서 백 몇 십 불 줬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안주냐부터 시작해서 다 태업하고, 납기 그런 거 안 지켜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후발기업들은 그런 면에서만 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통일부에서는 실제로 남북협력기금도 상환유예가 되긴 될 겁니다. 안된다고 단정하시는 거는 잘못 아시는 거고, 지난 번부터 얘기가 남쪽 본사가 적자가 나던지 북측 법인이 적자가 나던지 해서 두 개가 다 해당이 되야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벌어서 이것을 갚는 거지, 운영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상당규모 나지 않았을 때는 시설자금은 유예를 해줘야하는데, 적자나는 기업들은 실제로 상환할 재원이 없는거죠.

C 업체 대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 4개 업체는 2010년도에 5.24조치의 영향으로 원금 상환유예를 1년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기업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경영이 어렵고 자금 순환이 어려울 때는 상환유예 요청을 해서 어떤 정책자금이든지 타이밍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의 관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별해서 하니깐 실제 그제(상환유예 연장) 필요한 기업들은 못쓴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익 구조로 전환한 53개 업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 이익이 나서 이익으로 회계 계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측에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투자하고 이익이 나는 것을 원년으로 해서 5년 동안은 법인세 면제입니다. 6년차부터 8년까지 50% 그니깐 7%죠. 9년차부터는 이익의 14%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당연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로 회계 처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년 동안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는데도 53개나 되는 업체가 이익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한 세무당국의 압박이 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는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물리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회계처리라도 흑자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 적자가 나는데 말이죠. 이런 왜곡된 데가 개성공단입니다.

B 업체 대표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는데,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가는 사람한테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된다면서요?

>> 조봉현 박사

옛날에 학생들 갈테나 할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B 업체 대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면, 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한테는 이자 딱딱 받아 먹고, 이거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멀리 생각하면 남북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경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인데 그거 좀 이자 좀 싸게 해주고, 돈 못벌어서 어려워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도 좀 해주고 그것도 못하나? 너무한 거 같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F 업체 대표

어차피 개성공단이 생겼으면, 개성공단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크도록 하는 것이 남과 북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서 성공을 해야 향후 우리 정부나 남과 북의 관계가 모든 부분이 상당한 발전과 이익 구조를 창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느 업체가 개성공단에 건물을 90% 졌습니다. 그런데 5.24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에 못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5.24조치에 따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사장이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투입이 되었는데,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날짜가 다가오니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신보나,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에서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개성공단 만큼만,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 만큼은 별도의 금융기관을 정해서 그 기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4대강 공사에 4~5조원씩 쓰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1,000억, 2,000억 정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진출하려는 업체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그 개성공단이라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D 업체 대표

이제 작은 얘기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참 쓰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써야 되는데 쓸 용처가 없단 말이죠.

인천시만 해도 쓸 모양으로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자전서 사가지고 개성공단에 보내는 거 이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인제 금융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현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유독 그쪽에는 상당히 인색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런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꼭 중앙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이러이러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07년도에 태클 걸어가지고 그것도 유아무야되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건지,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걸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주시죠.

>> 조봉현 박사

원래 개성공단도 그렇고 남북경협 할 때 남북협력기금으로 용자를 처음에 했잖아요. 초창기 시공업체부터 해가지고 협력기금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 정부에서 딱 결정을 해가지고 협력기금에서 선정이 되면 꼭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2007년도가 그때 바뀐 거잖아요. 협력기금에서는 개성에 들어가는 기업 지원 못한다 정하고 그걸 신보나 기보 쪽으로 돌리면서 전향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이나 이쪽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던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깐,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힘들고, 아까 상환문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중소기업하면 당연히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런 거 같아요. 협력기금에서 원래 했던대로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협력기금 차원에서 다시 대출을 시행하는 쪽으로 다시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협력기금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남북경협 하는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자금이니깐 일반금융에 비해서 다소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이런 것도 협력기금 쪽이 싸니깐 유지할 수 있을 거 같다.

그게 1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금융기관 이미 다 거래하면서 대출받고 상환 안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십 몇 프로 올라가고 이

런 부분들있잖아요. 이거를 은행에서 하라 하면 절대 안합니다. 그거를 협력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기업들은 5.24조치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기업의 경영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은행 보고 하라고 하면 안되니깐, 은행은 원래 있던 이자 고수는 해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해결해 하면, 그러면 또 얼마 안되요. 그런 형태라도 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놓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될지 않을까 합니다. 상환 연장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마 지금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하면 절대 안해줄 겁니다. 특히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조그만 리스크 진다하면 그게 은행의 습성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될 겁니다.

협력기금 사용 지원 및 보상법 같은 것 등도 정부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 개성공단기업이나 남북경협기업들은 5.24조치 때문에 힘든 것이 있으니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부가 딱 내려줘야 그래야 밑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D 업체 대표

개성공단에 3가지 보험이 있지만, 이 보험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구요. 결국은 협력기금을 어떻게 재가동해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요구들과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F 업체 대표

그러니깐, 기보나 신보 다른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만큼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 거 같아요.

조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개성공단 진출업체나 예정업체

들은 모든 금융지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옛날처럼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 하면은 다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A 업체 대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 관리위원회가 통일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기구 아닙니까? 뭐 북쪽에 있는 공단의 관리기관이지만, 사실상은 통일부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그 관리위원회가 기업 보호하는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다 예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와서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한국 최신의 건설규정, 환경규정 이런 거만 쪽 북쪽에 알려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북측이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끄덕하면 다 공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개성공단을 위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게 LNG가 싸잖아요 LPG 보다 그런데 지금 그 비싼 LPG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LNG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LNG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트럭으로 옮겨가지만, 트럭으로 옮겨가더라도 LNG 단가가 훨씬 싸거든요. 그런 부분만으로도 개성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큼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항상 생각이 개성공단은 특혜를 받았다. 다 막았는데 그래도 니들은 연명하게끔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문 안단은 걸로나 해도 감지덕지하라는 식인데, 실제로 개성공단은 지금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 조봉현 박사

논의를 조금 깊게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쪽 말씀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가 되었던 보험사의 문제가 되었던 3통상의 문제가 되었던 정부차원에서 이걸 좀 바꿔야된다 이게 지금 안되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 이걸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못바꾸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사례도 좋구요,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해주시면 정리가 되고 대안을 찾아내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C 업체 대표

그게 기업인들이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인식이 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그동안 겪어보면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은 말로는 항상 하지요. 장관님, 차관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는 애당초에 상당히 부정적인, 물론 그것이 정권의 이념이라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저희도 알죠. 그래도 그 전에서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명 정도 사업지원단에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있는 조직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실제로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그런 의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흥 모 사무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임기가 되어서 원대복직 해야 하는데 저희 기업인들이 서명을 다해서 한 번 더 연임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끔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 환경이 되었고, 그런 여파로 기업인들은 점점 더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차라리 문을 닫고 정부에서 투자한 것 정도만이라도 보상은 해준다면은, 아마 제 개인 판단에는 2/3 정도는 나갈라는 의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고 상당한 수익성을 내며는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구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매때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 이구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들 신분보장을 정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전에 파견 식으로 근무할때는 북측에서 출입규제 해버리면 못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다시 파견나오고 했었거든요.

>> 박병석 부의장

신분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 조봉현 박사

그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안되어 있어 소신껏 일을 못한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C 업체 대표

또 다른 하나는 5년 동안 말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금융지원 같은 것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지원을 못한다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던지 하라고 말을 하던지 하지,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조치가 안되니깐 기업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 박병석 부의장

금융지원 약속이 문서로 남아있는게 있어요?

C 업체 대표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문서로 해 주겠습니까?

>> 조봉현 박사

그게 지금 운전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환 쪽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C 업체 대표

기업들이 돈을 유입하는 경로는 다양한데, 부실이 심화되면 제2금융권으로도 가고요. 뭐 심지어는 사채도 가겠죠. 개인 간의 채무도도 발생하고요. 그런 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1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서나 기업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쓰는 부채 그리고 또 최근 5년 아니면 5.24 조치 이후에 증가된 부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이 부채가 새로 발생하였으면, 그 발생한 부채는 남북협력기금을 써서 대환형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상환유예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왜냐면 계속 상환이 도래하는 것들이니깐 그것들을 흡수해서 세이브를 시켜주니깐 기업은 자금 압박을 당분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호전될 때까지 텀을 가질 수 있죠.

>> 조봉현 박사

5.24 조치 이후 기업들의 부채 이런 것들을 협력기금에서 서포트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5.24 조치 때문에 기업인들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줘라 할 수는 있겠지...

A 업체 대표

그거는 어려운 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지금 개성공단은 지금도 이익을 내고 돈을 버는 데가 있잖아요. 빚을 거꾸로 갚아나가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수는. 그러면 갚아나가는 데도 있는데 니들은 니들이 경영 잘 못해가지고 빚 늘어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 조봉현 박사

아까 상황이 도래한 거 있잖아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5.24조치 때문에 멈췄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거 고려 안하고 그냥 기한되면 상환요청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청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연장을 시켜주던지. 그 다음에 5.24 조치 때문에 운전자금이 일시적으로 힘들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준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E 업체 대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생산 활동에 대해서 저하되는 문제를, 저희가 쪽 해보니깐 생산 활동하는데 개성의 특소성을 봐가지고 여기서 할 때는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금방 조달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출입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만큼은 하루에 잡아서 좀 왔다갔다 마음대로 해줄 수 있게 해주면, 모든 부족한 부자재 같은 것들을 좀 더 원만히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A 업체 대표

그게 지금 3일 전에 출입신청하게 되어있는데 대피 CEO 만큼은 당일 왕래, 적어도 1일 전에만 신청해도 그 다음날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E 업체 대표

상황 도래하는 대환 문제인데요. 5.24 조치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후발업체는 50~60%밖에 가동이 안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못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3년 거치 돌아오는 도래 상황을 좀 대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요청입니다.

A 업체 대표

대게 그쪽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시설자금이니깐 특별보증을 썼던 어쨌든 그것이 담보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갖고 나면 이 북쪽에 있는 담보는 인정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빚만 우선 막았지, 돈을 못 벌은 상태에서 원금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담보 가치를 못하는 거죠.

>> 조봉현 박사

3년 전에 개성공단 들어갈 때는 개성공단 현지에 투자했던 게 담보로 해가지고 일단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기한이 끝났고 이것을 상환하더라도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안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은행이 나오든지, 기존에 했던 은행이 그것을 인정해서 다시 해달라는 건데, 안해준다는 거잖아요.

C 업체 대표

그러니깐 여기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D 업체 대표

누차 나왔던 얘기입니다 만은, 시정되지 않았던 안건이죠. FTA 역외가공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만 상당히 업체한테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기숙사. 꼭 좋은 시설의 기숙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 내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성시내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서 3만 명이든, 2만 명이든 현 입주 업체들만이라도 쓸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남북협력기금법, 아까 말씀 드렸던 협력법이나 기금법 등이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것은 개성공단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한정되어지는 법인데, 그것도 뭐 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로 여기 모여 앉아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북 경험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는 이런 협력법과 기금법이 개성공단지구법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병석 부의장

협력법, 기금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바꿔줘야 하는가?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협력법 중에서 어느 조항이 필요하다 기금법 중에서 어느 뭐를 마련해달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 업체 대표

보험이 있습니다. 손실보험하고 화재보험이 제일 많은데, 교역보험은 있습니다만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다고요. 통일부에서 교역보험을 언론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상당히 그 보완재로서 유용하다 홍보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가입한 곳이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가입을 안받아줍니다.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깐 주로 여·수신 담당하는 부서가 개성공단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당히 고압적이고 불친절합니다. 그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실보험은 수출입은행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다 소멸성입니다, 상당히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을 투자하면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그것이 시일이 경과하면서 재산상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보험요율도 상당

히 높구요. 그래서 그게 남쪽의 물적보험 식으로 원금이 보전되는 적립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상품성을 위해서도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측면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적립식으로 하는 것을 기업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이 있는데요. 화재보험은 개성공단에서 북측 화재보험회사에 납입을 합니다. 보장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북측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끼웠다. 만약에 화재가 나서 재산상의 손실이 나면은 남쪽 기관에서 보상하도록 됐어야 하는데, 지금 북쪽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구요. 그 보험요율도 역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율로 되어있고, 소멸성으로서 그냥 뜬어가는 식으로 되어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원을 빼간다는지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북한 당국에서, 지도총국에서 개성공단의 인원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이용해서 사람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0여명의 숙련공들이 5년 동안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깐, 조반장급들 자기네들이 초코파이나 여러 가지 간식, 성과급 등을 더 달라했는데 안들어주면은 5명에서 10명씩 결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기결근 처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아주 베테랑들을 다 빼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300여명의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1/3을 빼간 것입니다. 나머지 200여명이 그 숙련된 100여명이 내는 효율을 못따라 잡니다.

A 업체 대표

지금과 같은 환경 하에서는 개성공단을 확대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완전히 막혀있으니깐 모든 것이 표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세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것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법에 보면 조선민족보험이 독점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험을 안들게 되면 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는데 자기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으로 전세계적으로

다 임의보험인데, 북한에서는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처럼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이슈화 되겠지만, 자기네 임의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 탈세로 인정하면 벌금을 200배 물리고, 또한 거꾸로 사기업이 거래계약을 하면 그걸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계약단가를 다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받은 결과가 그것이 북측에서 생각할 때 가격이 안맞는 거 같다면 임의로 그 가격을 정하겠다 이런 식이면, 이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노예하려고 가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의 경험을 하면 안되죠.

>> 조봉현 박사

최근 북한에서 세법을 일방적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과거까지 소급적용해서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맞지 않다. 통일채 사신 분들은 당국 차원에서 대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들에게 물려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건 집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A 업체 대표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있어서도 지금 업체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B 업체 대표

이자가 달라요. 저의가 협동화사업을 6개 업체가 했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업체별로 5%짜리 5.4%짜리 6%짜리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A 업체 대표

협력기금대출 건에 있어서 통일부에서 기금관리팀에서 했는데, 저는 수출입은행에서 임의로 한 줄 알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담이

온 게,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다 그건 통일부에서 더 받으라고 정한 거지, 이자도 통일부 계좌로 그대로 가는 거지 자기들이 이자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E 업체 대표

근데 돈을 갚으면 이자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수출입은행에서 저희가 0억 0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4을 갚으라 해서 상기 금액을 갚았는데, 그때 당시 갚기 전에는 1.9% 였는데, 갚고 나니깐, 이자가 2.5%로 오른거예요 이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출입은행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통일부에 넘겨요. 그래서 통일부에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또 다른 곳으로 넘겨요. 이렇게 되어서 종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 박병석 부의장

일반적이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북한의 위험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건가, 최종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의 결정의 기준이 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길 비서실장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의 답변은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이율은 2%라고 합니다. 나머지 1% 또는 1.2% 정도 추가적으로 붙는 것은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합니다. 협력기금의 이율은 2%로 같고, 은행이 평가하는 이율이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A 업체 대표

신용도가 금리 차이의 이유라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봐라 하면 통일부는 그 근거 하나도 안가지고 있고, 더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업체한테 차등이라는 얘기를 안해줬다니깐요.

E 업체 대표

그렇다 치면 정부에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 조봉현 박사

제가 알기로는 협력기금에서 기준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에서 가감을 시키는 건데 만약 그게 수출입은행의 권한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A 업체 대표

수출입은행에서 답이 온 게 자기들은 금리 측정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 조봉현 박사

장장 2시간 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좀 더 쉽게 해결되고, 또 개성공단이 살아야 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고 발전적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직접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감사합니다.

>> 박병석 부의장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개별문제를 일일이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정부와 우리 관계 당국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성공단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의 실책, 경기전망을 잘못했다던가, 과잉설비를 가지고 갔다던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오더를 덜 받았다던가 하는 모든 것을 당국의 책임이라던가 북측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 정당한 주장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실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런 모두를 정부 당국이나 북한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이 시초고 그 다음에 저는 남북경협이 우리 한국 정부에 마지막 탈출구라 그럴까 희망이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성공단이 성공이 되어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